

자동차·철강 업계, 트럼프 방한에 '촉각'

한미 정상회담에서 자동차·철강 대표적 무역 불균형 사례로 지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하루 앞둔 6일 국내 자동차·철강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표적인 무역 불균형 사례로 꼽은 자동차와 철강 분야에 대해 어떤 강성 발언을 내놓을지 주목되기 때문이다.

한미 FTA에서도 불사한다는 입장을 가진 것으로 알려진 그의 발언 수위가 예상을 뛰어넘을 경우 가뜰스나 경쟁 심화와 반덤핑 조치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미국시장에서 우리 업체들은 상당한 곤경에 맞닥뜨릴 수 있다.

6일 업계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을 주장했고, 지난 6월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자동차와 철강을 대표적 무역 불균형 사례로 지목했다.

지난달 초에는 한미 FTA 협상을 담당하는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

대표부(USTR) 대표에게 "이 사람이 너무 미쳐서 당장이라도 손을 뗄 수 있다고 그들(한국인들)에게 말하라"고 지시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북핵과 함께 무역균형을 주요 의제로 삼을 전망이다. 다만 철강이나 자동차 등 구체적인 분야까지 언급할지는 미지수다.

한국경제연구원은 한·미 FTA 개정으로 미국이 자동차·기계·철강업의 관세율을 올리면 앞으로 5년 동안 수출이 최대 170억달러(약 19조원) 감소하고, 일자리는 15만2400개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FTA 개정이 현실화할 경우 중국의 사드보복으로 힘든 길을 걸었던 우리 산업이 또다른 암초를 만나게 되는 셈이다.

자동차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번 정

상회담에서 북핵 등 북한 이슈가 주로 논의될 것으로 보지만 통상 이슈가 언급될 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며 "미국이 관세를 올릴 경우 판매인센티브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국시장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자동차업계는 최근 미국 내에서의 경쟁 심화와 판매부진을 겪고 있다. 현대차와 기아차는 지난달 미국에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3% 줄어든 9만 7407대를 판매하는 데 그쳤다.

철강업계의 경우 FTA 개정이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지만, 7407대를 판매하는 데 그쳤다.

철강업계의 경우 FTA 개정이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지만, 7407대를 판매하는 데 그쳤다.

한 철강업계 관계자는 "WTO 하에서 무관세이기 때문에 FTA 개정의 영향은 거의 없을 것"이라며 "반덤핑 관세 등으로 미국으로부터 이미 통상 압박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미국의 통상 방향을 볼 수 있다고 판단, 트럼프의 입에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뉴스

제하고 있다.

일부 한국산 철강재에는 최대 65%의 반덤핑관세가 부과됐고, 현대일렉트릭이 미국에 수출하는 대형 변압기에도 61%의 반덤핑관세가 부과됐다.

지난달에는 미국 상무부가 한국산 유정용 강관에 최대 40%의 반덤핑 관세 부과 예비판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미국 수출이 가장 많은 넥스틸의 관세는 기존 29.76%에서 46.37%로 올랐고, 현대제철과 휴스틸은 기존 16.25%의 관세 폭탄을 맞았다.

한 철강업계 관계자는 "WTO 하에서 무관세이기 때문에 FTA 개정의 영향은 거의 없을 것"이라며 "반덤핑 관세 등으로 미국으로부터 이미 통상 압박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미국의 통상 방향을 볼 수 있다고 판단, 트럼프의 입에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뉴스

김동연 "급격한 이상징후 없는 한 3% 성장 달성 가능"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4분기에 아주 급격한, 예상하기 어려운 이상징후가 없는 한 3%(경제성장률) 달성은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금년 1분기 1.1%, 2분기 0.6%, 3분기 1.4% 성장한 점을 근거로 이 같이 밝혔다.

반도체에 기반 성장이라는 지적에는 "우리로 인식을 같이한다"면서도 "우선 거시경제 목표인 3% 성장 달성이 중요하다. 동시에 공정경제를 토대로 두 가지의 경제정책(소득주도 성장·혁신 성장) 축을 통해 이종구조를 해결하는 노력을 같이 해야 한다. 특정 업종이나 산업으로 경제를 끌고가는 것에 대해 유의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불공정과 특권경제를 '적폐'로 규정하고 이를 청산해야 저성장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언급한 점과 관련해서는 "통의한다. 기술어린 운동장, 반칙과 특혜가 횡행한다면 지

속 가능한 성장이 어렵거나 두 성장(소득주도 성장·혁신성장)의 기동성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한다"며 "우리 경제의 체질 강화를 위해 공정경제 하에 두 축으로 나갈 때 사람 중심의 지속 가능 경제가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공무원 17만4000명 증원 계획에 대한 향후 30년간 총지출 대비 인건비 비중은 현재와 유사한 8% 수준으로 관리 가능하느냐는 질의에는 "30이든 60이든 전체 인건비 규모가 중요한 게 아니라 총지출 대비(인건비) 비중이 감내할 수 있느냐"라면서 "30년 추계에는 문제가 있다. 5년 추계 때 8%대에서 충분히 관리 가능하다고. 앞으로는 총지출 증가율(7.1%)의 분모가 훨씬 늘어난다"고 말했다.

다국적기업의 조세 회피 문제와 관련해서는 "현재는 고정사업장 기본으로 하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도의(국제적) 논의에 우리가 참여하고 있다. 관심있게 보겠다"고 언급했다.

/뉴스



군산 아트페어, 하림 무료 시식회 성료

춘천시 순살 닭갈비 400인분 맛볼수 있는 기회 제공

닭고기 전문기업 ㈜하림(대표이사 이문용)의 전국 방방곡곡 찾아 가는 하림 푸드트럭이 지난 4일과 5일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지스코)의 '2017 군산 아트페어 & 핸드메이드페어'에서 하림의 제품 체험 제공과 무료 시식회를 진행했다고 6일 밝혔다.

하림은 4일과 5일, 매일 두 차례에 걸쳐 100인분씩 총 400인분의 '춘천시 순살 닭갈비'를 아트페어 참가자 및 관람객들에게 무료로 맛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하림 춘천시 순살 닭갈비'는 국내산 순살 닭고기에 하림만의 특제 양념을 더해 만든 간편식으로,

'순한맛'과 '매운맛'이 나뉘어져 있어 취향에 따라 누구나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하림의 대표 제품이다. 또한 개인 SNS 채널에 #하림, #하림푸드트럭 해시태그를 포함한 푸드트럭 현장사진을 포스팅 한 선착순 40명에게 하림 선물 세트, 하림볼 쿠폰 등 다양한 경품을 증정했다.

한편, 11월 2일부터 5일까지 진행된 '2017 군산 아트페어 & 핸드메이드페어'는 군산 새만금컨벤션센터 주관으로 개최된 전북지역 최대 규모의 종합 미술 박람회로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

/익산=장양원 기자

공정위, 자동차부품 업체에 371억원 과징금 부과

자동차 부품 입찰에서 낙찰자를 정하거나 서로 시장을 침탈하지 않도록 답합한 자동차부품 업체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자동차 부품 시장에서 답합한 덴스코코리아·현답·델파이파워트레인에 시정명령과 총 37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일본 덴소와 덴스코코리아, 현답산업은 국내 완성차업체가 발주한 연료펌프 플랫폼별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자를 정하고 투찰가격 정보를 교환했다.

덴소는 각종 자동차부품을 생산하는 일본 사업자로 2009년 기준, 토요타자동차 그룹의 계열회사 지분이 약 30%를 차지하고 있다. 덴스코코리아는 덴소의 국내 자회사로 자동차 가변벨트 이미징·와이퍼·연료펌프를 생산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덴소의 지분 71%를 보유 중이다.

현답은 국내에 소재하지만 2002년 일본 아이신요우코우 주식회사(이하 아이산)의 계열회사로 편입돼 아이산의 지분이 약 96%를 보유 중이다.

국내에 연료펌프를 공급해오던 덴스코코리아와 현답은 가격적인 압박에 대응하기 위해 답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사업자는 사전에 결정한 입찰 플랫폼 낙찰예정자가 상대방보다 낮은 투찰가격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답합했다.

덴소와 덴스코코리아, 델파이파워트레인은 자동차 가변벨트이미징 입찰시점에서 서로 시장을 침탈하지 않도록 답합했다.

델파이파워트레인은 자동차 부품을 제조·판매하는 국내 소재 회사로, 미국 델피아가 70%의 지분을 갖고 있다.

이들 업체는 단기간의 압력이 있자 상대방 업체가 납품하고 있는 가변벨트 이미지링 시장의 진입을 자제하기로 했다.

배영수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이번 답합 건은 2014년 1월부터 진행된 자동차 부품 규제담합 제재 건으로 사업자의 국적 등을 불문하고 철저히 감시하여 엄정하게 제재하겠다"고 했다.

/뉴스

미세먼지 측정장소 5배 확충

빅데이터 기반 국민 체감형 미세먼지 대응 서비스 구축

정부가 미세먼지 측정장소를 내년 1분기까지 1500곳 확충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은 올해 빅데이터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통해 '빅데이터 기반 국민 체감형 미세먼지 대응 서비스'를 KT와 함께 구축했다고 6일 밝혔다.

현재 미세먼지 농도 현황은 전국 97개 시·군에 설치된 323개 측정소에서 측정돼 한 시간 간격으로 한국환경공단단의 에어코리아(www.airkorea.or.kr)를 통해 제공되고 있다.

다만, 측정 장비의 정확도에도 불구하고 장비의 수가 많지 않아 가깝게는 수 킬로미터, 멀게는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광역 공기질을 표현하기에 개인 체감도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번에 구축된 '빅데이터 기반 국민 체감형 미세먼지 대응 서비스'는 올해 말 제주도, 창원시, 광명시에 시범 적용한다.

해당 지역의 기존 측정소 15곳 외에 통신사 기지국 등에 수십 미터에서 수백 미터 간격으로 촘촘히 설치한 115개의 사물인터넷 기반 소형 공기질측정기 정보를 활용해 운영지역 없는 실시간(1분 간격) 미세먼지 관측이 가능할 전망이다.

수집된 공기질 데이터는 통화량 기반의 이동인구 정보(성별, 연령, 시간대 등), 날씨데이터, 질병정보 등과 결

합해 다양한 미세먼지 대응 서비스 제공에 활용된다.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시간대의 사람이 많이 다니는 지역을 중심으로 살 수차 이동경로와 운송 빈도를 최적화하는 등 지자체 환경정책 의사결정을 지원한다.

또한 기존 영유아, 청소년, 노인 등 건강 취약계층 뿐만 아니라 연령별, 성별, 공기질 관련 질환 여부 등에 따른 위치기반 개인 맞춤형 상세 대응 명령을 문자메시지로 제공한다.

앞으로 과기정통부는 올해 시범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지자체·KT 등 민관과 협력해 미세먼지 대응서비스 제공 지역의 전국 확대를 지원한다. 더불어 소형 공기질측정기 데이터를 정부 및 지자체 등과 공유해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KT는 내년 1분기까지 서울 및 6개 광역시 주요 거점 1500곳에 미세먼지 측정기를 설치할 예정이다.

최영태 과기정통부 인터넷융합정책관은 "빅데이터 플래그십 프로젝트로 대기·환경 분야까지 빅데이터 활용 범위를 넓혀 미세먼지 대응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국민들이 미세먼지로 인한 걱정과 불편을 줄여 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뉴스

우리동네 무인주차장 어디에 있을까?

주차하고 구경하고 무인주차장에 주차하면 시간도 절약되고 편리합니다.



[전주시 무인주차장 안내]

- 서부신시가지 도형열**
 전주시 완산구 흥산북로 75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노송천 주차장**
 전주시 노송여울2길 108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덕진광장 주차장**
 전주시 덕진구 덕진광장로 3 (239-2562)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서부신시가지 농협중앙회 부근**
 전주시 완산구 흥산북로 53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서부신시가지 다은병원 부근**
 전주시 완산구 흥산2길 5-12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서부신시가지 KB은행 부근**
 전주시 완산구 흥산1길 4-13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실내체육관 주차장**
 전주시 덕진구 관삼대로 308 (251-1264) (연중무휴) 4,000원 기본(30분):500원, 추가(15분):250원